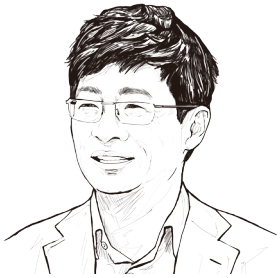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1] 무역을 통한 질병의 전파



글 박형철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예방의학전문의

감염병이 무역과 상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을 통한 질병의 전파, 꽤 생소하다. 그동안 우리는 보건학 또는 감염병을 통해 질병 전파는 유행성 눈병, 성병처럼 '접촉'을 통한 전파, 말라리아, 황열처럼 '모기 등 중간숙주'를 통한 전파, 콜레라, 장티푸스처럼 '음식물'을 통한 전파, 호흡기 감염병처럼 '비말 또는 공기전파' 등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질병이 무역·상업에 따라 전해진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19세기 영국의 의사는 '전쟁과 상업'을 두 전제자(專制者)로 묘사했다. 책의 원저는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로 직역하면 '전염병, 상업이 어떻게 질병을 퍼뜨렸을까'가 아닐까 한다.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로 번역한 역자의 혜안이 놀랍다. 전쟁과 유행병에 관한 연구에 비해 무역과 전염병의 조합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빈약하다. 그러나 인류가 겪었던 콜레라, 가축 역병, 인플루엔자, 페스트 등이 전쟁과 교역의 산물임을 볼 때 무역이 감염병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주장에 토를 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1) Mark Harrison 저, 이영석 역.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2021, 푸른역사

감염병이 무역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무역과 상업이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었다. 페스트 때 원격지 무역, 아메리카의 신종 감염병 유입, 시장 통합에 이은 병원균 대교환 등이 대표적 예로, 무역에는 개별 국가들의 의지나 정책 방향, 그중에서도 위생이 다소 나은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자유무역주의자와 위생주의자들 간에는 명백하거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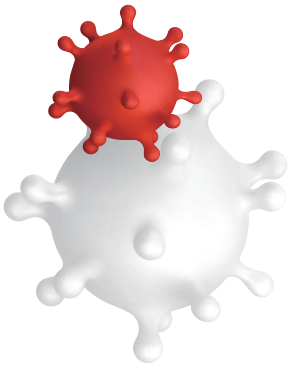
외교적 도구로 활용됐던 강제격리

페스트 전파에 무역의 책임이 제기되자 배를 묶어 두는 '격리(quarantine)'가 시행되었다. 구체적 경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근대 유럽 국가들은 경험상 선박·승객·화물 등을 통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인지했고, 자국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했다. 질병 방어가 아닌 경쟁국에 타격을 주는 데도 격리가 사용되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런 조치의 부당성에 불평했으며, 국가 간의 긴장도 유발되었다.

17세기 후반과 19세기 말 대분기(great divergence)[2]가 일어났을 때 질병에서 자유로운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검역과 위생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 "국가의 중요한 책무는 사람·동물·물건 등 일체의 감염원과 감염체의 유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강제격리는 의학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였고, 종종 '앙갚음식(tit for tat)' 외교의 장을 만들었다.

강제격리는 심각한 분쟁을 낳았지만 유럽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한편 소독 증명서가 권고되면서부터는 격리가 최소화되고 상인들이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출항 시 보건증은 선박의 격리조치 폐지, 격리기간 단축 또는 기간의 자의적 연장 금지 등 합리적 제안의 근거가 되었다.

2) 서방세계 국가들이 전근대적 성장 제약 요소들을 극복하고 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



위생 질서 토대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1855년 중국 윈난성, 1894년 홍콩 등에서 발생한 페스트 대유행은 인구 과밀과 비위생적 환경은 물론, 아편 무역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페스트 대유행은 사회 혼란과 공황을 낳았지만, 국제 협정 등 새로운 위생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산업화 국가들은 질병 감시와 표적 개입 방식, 사람과 상품 유통방식, 합법적 위생통제 등의 시스템을 정교히 구축해 전염병 억제나 퇴치를 하였다. 나아가 건강과 국내 산업 보호를 가능하게 하였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위생과 무역의 기술적 장벽 쌓기로 무의미해졌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는 질병 위협 방지 목적의 지침에 대한 초안 작성 정도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기구는 무역과 관련된 질병을 다루지만, 감염위험 평가에 논란을 가져왔고 경제적 이익에 염두를 두는 등 성급하고 단편적으로 접근해 아쉬운 점이 있다.

풍토병 넘어 전염병으로, 세계화와 위생 문제

세계화 관련 위생 문제로 소와 인간에게 영향을 준 사례가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다. 당시 영국 정부는 감염 가능성 있는 모든 동물을 도살하였다. 1995년 한 영국인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3]으로 사망하였고, 변종 전염병은 프랑스 등 유럽, 캐나다, 미국 등에도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소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해 심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폐렴이 발생하였고,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홍콩 상업 금융 중심지 등에서 3백 건 이상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3월 15일 세계보건기구는 캐나다, 태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을 확인하면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SARS)'이 "전 세계적 보건 위협"임을 천명하였다. 3월 19일까지 미국, 스페인,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에서 추가 의심 사례 보고되었다.

3)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변종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프리온은 광우병 유발 인자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부산물을 섭취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스는 21세기 들어와 위력을 발휘한 첫 신종 감염병으로 국가 간 교류에 따라 질병이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이동한 사례였다. 2003년 10월까지 29개국 8,098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774명이 사망하였다. 종의 장벽을 넘어 세계화 또는 상업, 관광 네트워크에 따라 대유행병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사회교류의 증대, 즉 근대 이후 국가 간 교역과 무역 활성화는 풍토병을 국지적 전염병으로, 또 세계적 전염병으로 변모시켰다. 일부 국가들은 검역, 접촉자 추적 및 격리를 통해 통제하였으나 공공의 건강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건강 보안(health security)' 회복이 관건이다. 감시와 봉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반대로 조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국경을 넘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 내지 대유행병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때 상업·공업·농업이나 여행 규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 또 감시와 억류에 집착하면 병원균 전파를 은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코비드 팬데믹에서 절대 격리와 이동금지 등에 의존했던 중국, 미국 등은 조치의 정당성이 의심되었다. 반면 조기 발견과 시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했던 우리나라의 조치가 돋보였다.

전염병·무역·방역 간의 삼각관계에서 무역이 전염병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을까. 돌이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병이 된 이유가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강력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지구촌 연결망이 톡톡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역이나 상업이 감염병 발생 내지 확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인간의 건강 복리에 복무하고 앞으로 닥쳐올 전 지구적 유행병을 막기 위한 노력에서 상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과제와 함께 말이다.